

민주, 호남 무소속 복당 어떻게 될까

분란 우려 개별심사 후 선별 복당 될 듯

박지원·이윤석·김영록·강운태·이무영·유성엽 의원 등 6명

정세균 대표, 당분간 당 체제 정비 주력...다소 시간 걸릴수도

정세균 대표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호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복당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세균 대표체제가 출범에 따라 호남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될 전망이다"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 자체를 7·6 전대 이후로 미뤄놓은 바 있다. 현재 호남권 무소속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복심인 박지원(목포시) 의원을 비롯한 이윤석(무안·신안), 김영록(해남·완도·진도), 강운태(광주 남구), 이무영(전주 완산 갑), 유성엽(정읍)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이들 모두 총선 과정에서 복당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초 대선 도전 선언과 함께 구 민주당을 탈당한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았다가 지난 3월 복당이 불허됐던 강운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총선 공천에서 낙선한 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이스이다.

대체로 이들이 넓은 의미의 '민주당 식구'인 만큼 긍정적 입장에서 복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더욱이 '공통 여당'의 탄생으로 '소야'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한 석이라도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4석이 나 되는 무소속 의원들의 민주당 복당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괄 복당이나, 개별 복당이나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당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대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일괄 복당 조치에 대해 "이런 저런 허물을 가리지 않고 일괄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부패 원조'같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개별 복당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법하다. 정 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 신청이 있으면 개별심사를 통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복당 심사에서 탈락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는 현재 재관에 계류중인 강운태 의원과 총선 전후 감정적 앙금이 상당한 이무영 의원 등의 복당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세균 대표 체제가 당분간 당 체제 정비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무소속 호남 의원들의 복당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무소속 의원은 "거대 여당에 맞서 대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 6명은 지난 10일 만나 "복당 문제를 무조건 서두르지는 않되 함께 움직이자"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임시절 기록물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방문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사저 앞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盧 전대통령 'e지원서버' 보유 확인

김영호 차관 봉하마을 방문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13일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서버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방문조사를 마친 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서버 보유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사본 논란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원본-사본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 전체를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관한 자료 이외에 극히 사적인 메모·기록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정부의 즉각적인 자료회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전용선'을 설치하는게 적합한 지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서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마친 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열람 편의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조사 뒤 전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경수 전해철 양정철 비서관 등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록 유출이라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며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유출이 아니다"며 "열람서비스와 관련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면 e지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감사원장·장관 인사청문안 국회 제출

정부는 김홍식 감사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개각대상 3개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태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

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원구성 협상을 먼저 끝낸 후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힘겨투기가 예상된다.

관련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순탄치 못할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與野 이번엔 상임위원장 '쟁탈전'

이번 주중 제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당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17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폐지가 확실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뺀 16개 상임위가 18대 국회에서 가동된다고 가정할 때 한나라당은 복당할 친박 인사들까지 의석수에 포함시켜 11~12개를, 민주당은 6개 이상을, 자유선진당은 2~3개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이하 17대 국회 상임위 명칭)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유선호,

이낙연 의원이 거론된다. 재경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는 한나라당 서병수,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홍재형, 강봉균 의원 등의 이름이 당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기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 건교위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조진형, 송광호, 윤두환 의원 등의 3과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1순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문광위원장을 놓고는 한나라당 정병국, 고홍길, 심재철,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김부겸 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 12, 민주 6, 선진 3개 목표 문광위 등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이와 함께 가장 많은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한나라당의 경우 남경필 박진 의원이 통의통의위원장 자리를, 정갑윤, 원유철 의원이 행정위원장을 내심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 국방위원장은 김학송, 산자위원장은 이병석 의원이, 교육위원장은 김영선, 예결특위위원장은 이한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이 복당할 친박 의원들 중 박종근, 이해봉, 이인기 의원 등 3~4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가축법 개정특위 등 민주 6개 특위 위원 선임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과 설치키로 합의한 6개 국회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에는 김동철, 김우남, 김상희, 양승조, 강기정, 송민순, 가축전염병예방특별위원회에는 최인기(위원장), 김중률, 우윤근, 노영민, 김재윤, 박선숙 의원이 선임됐다.

공기업대책특위 위원으로는 이석현(위원장), 주승용, 강봉균, 박영선, 조영택, 최문순, 민생안정대책특위 위원으로는 전병헌, 이종걸, 변재일, 최철규, 강창일, 이용섭 의원이 임명됐다.

또 국회법·상임위원 규정 개정 특위 위원에는 서갑원, 조정식, 신하용, 양승조, 김우남, 안민석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6, 18, 21, 22일 실시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때 쇠고기 관련 질의자로 조배숙, 이강래, 김중률, 안민석, 김재윤, 조경태 의원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평화를 지향하며,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의 시대부합성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강정책에 '개헌 추진' 명시

민주당이 최근 당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추진을 명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당이 당의 노선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정강정책의 첫머리에서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해 한반도

Advertisement for Hansol (한솔) featuring a woman in a yellow uniform and text: '한솔과 함께할 창업주를 모십니다. 전국 400여 점포에서 확인된 16년 (주)한솔의 노하우로 만장일치의 창업을 시작하십시오.' Includes logos for '한솔' and '한솔인사'.